

4. 소비자금융 활성화 정책과 기대 효과

- (주요 내용 및 배경) 주택 자금 4조 1,500억 원, 일반 내구소비재 자금 3조 1,600억 원을 우선 공급하고, 은행을 통한 할부금융사의 매출 채권 매입을 유도. 이를 통해 주택업계나 내구소비재 유통업계의 와해를 방지하고 내수 경기의 진작을 꾀함
- (문제점) 실질적인 구매력 확대없는 소비 진작의 한계,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여력 부족 가능성, 유통업계의 신용질서 문란, 여신전문금융업의 틈새시장 상실
- (보완 과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증대를 위한 금리 인하 및 특소세 인하, 중장기적인 수요자금융의 발전 차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달력 강화와 중개역할 활용도 제고, 채권추심기관의 육성이나 자금결제 시스템의 개선 등이 필요

□ 소비자금융 활성화의 주요 정책 내용과 배경

- 주요 내용

- (주택자금 공급의 확대) 재경부는 주택 구입 자금 3조 6,500억 원을 은행, 생보사 등 금융기관(1조 6,500억 원)과 국민주택기금(2조 원)을 통해 공급하고¹⁾, 주택은행은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2,000억 원을 공급. 주택공사도 3,000억 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25.7평 이하)을 적극 매입
- (은행 통한 내구소비재 자금 지원) 총 3조 1,600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통해 은행별 품목 취급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전제품 대리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으로 은행 대출 기회를 제공. 대리점들이 할부 판매를 확대하고 할부 판매의 조건도 완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판매 회사에 의한 포괄 보증을 통해 은행의 우대금리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 (은행을 통한 매출채권 매입) 재경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할부금융사들의 매출 채권을 매입토록 함으로써 할부금융사들의 영업력 지원을 도모

- 추진 배경

-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생산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한계에 달하여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금융 방식으로 소비

1)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평균 3천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데, 우선 공급된 1조원에 대한 대출 신청은 9월 24일 하루만에 마감.

- 를 활성화시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함(아래 표 참조)
- 신용경색에 직면하여 업계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나 가전 유통업계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및 내구 소비재 구입 자금을 지원
 - 98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전년대비 12.5% 감소하여 가계 소득 감소에 의한 소비 지출 감소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98년중 은행대출 증가액 추이 >

(단위: 억 원)

	98.1/4	2/4	7월	8월	9월 ¹⁾
은행대출	79,065	-48,480	19,478	-26,231	-11,893
신탁대출 ²⁾	-27,498	-39,086	-12,131	-17,029	-15,299
계	51,567	-87,566	7,347	-43,260	-27,192

자료: 한국은행

주: 1) 9월은 25일까지의 실적치임 2) CP 할인 제외.

- 기대 효과

-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는 건설 업체, 가전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에 자금 공급으로 이어져 자금 경색의 일시 해소가 기대되나 지속될 가능성은 적음
- 연초부터 나타난 내구재 소비의 대체 수요 cycle의 지연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기존의 자금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치로는 수요 진작에 미흡함
- 신용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비중을 더욱 늘려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융권의 수익 기반 확충과 대출 금리 하락 효과가 소폭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현금카드(직불 및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 중심의 단순한 소비자 금융 서비스가 할부 금융, 리볼빙 카드의 도입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됨

□ 문제점

-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진 미흡

-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활성화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할부금융업계의 위축 가능성**

- 기존의 주택할부금융 및 일반 할부금융사들은 재원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번 은행에 의한 소비자금융 강화가 기존 할부금융사의 시장을 위축케 할 가능성이 있음

- **신용보증 활성화의 한계**

-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代位辨濟를 위한 지출이 과다하여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실시를 위한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유통업계의 불안정**

- 내구 소비재의 유통 과정에서 제조 회사와 대리점간에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리점이 직접 보증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책 보완 과제**

- (실질 구매력의 강화 필요) 특별소비세의 전반적인 인하, 대출 금리의 인하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 강화가 필요

-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1) 특별소비세의 전반적인 인하, 2) 대출 금리 하락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의 증대와 금리 부담의 경감 등이 필요
- 판매금융의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소비자금융업의 발전도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인 소비자금융 발전 계기로 삼아야) 여신전문 금융업이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저렴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여신전문 금융업의 저리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음
- 소비자금융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의 대량 매출 채권의 관리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여신전문 금융업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음
- 할부금융, 소비자리스, 신용카드업,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금융의 영역 통합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육성 방

안이 바람직할 것임

- (보증 기능의 보완 필요)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기금의 확충, 나아가 물적 담보에 의한 금융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 일반 내구소비재의 유통업계가 직면해 있는 신용질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부금융사의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채권추심기관의 육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통업계의 자금 결제 방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어음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임진국 jklim@hri.co.kr ☎724-4018)